

 금융위원회	보 도 설 명 자 료		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2.4.19.(화)	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이 수 영(02-2100-2650)	담 당 자	류성재 서기관(02-2100-2651)
	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 박 종 길(02-3145-8100)		장영심 팀장 (02-3145-8482)
	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 이 봉 헌(02-2003-9014)		허욱 부장 (02-2003-9370)

제목 : 기관투자자에 대한 IPO 공모주 한도 부여 등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. [한국경제 4.2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1. 기사 내용

☐ 한국경제는 4.19일 「기관투자가 ‘뺨튀기 공모 청약’ 손본다」 제하 기사에서,

❶ ‘금융위는 …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청약한도를 신설…’

- ‘운용사·연기금 등은 자기자본 일정 배수 이상을 청약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고, 펀드는 순자산가치에 비례해 한도…’


❷ ‘금융위는 … 최근 2년간의 공모주 신청·배정결과를 받아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으며’

- ‘조사과정에서 주관사와 자산운용사의 불공정행위를 일부 포착, 적발된 불공정행위에 대해 제재할 계획…’

❸ ‘금융위는 … 기관 분류방식과 공모주 배정기준도 표준화하기로 했다’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- 금융위는 최근 IPO시 나타난 기관 허수성청약 관행 개선을 위하여,
 - 관계기관과 함께 ①투자자들이 자금조달능력에 맞게 공모주를 청약해 투자하고, ②주관사의 공모가 산정 및 물량 배정에 있어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.
- 다만, 보도된 바와 같이 ‘기관투자자 공모주 청약한도 신설’, ‘금융위 전수조사 및 제재’, ‘공모주 배정기준 표준화’ 등은 현재 논의·진행되고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른 만큼,
 -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법령관리청 콜센터
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